

투데이 칼럼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전북 발전에 대한 단상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서 25가지 다양한 무작위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상세하고 해박한 답변은 국정 방향과 추진 의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단순한 국정 방향 설명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의 선언이었다고 생각된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가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은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 기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이자, 지역을 국가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메시지는 특히 오랜 기간 구조적 소외를 겪어온 전북 지역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다가온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가장 앞에 내세운 국정 전환의 축은 '지방 주도 성장'이다. 이는 그동안 반복되어 온 중앙 주도, 수도권 집중 성장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을 5국 3특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수도권에서 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상징적 의미이자 이 대통령의 신념이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지난번에 지급한 민생 지원금 지원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논리를 근본에서 다시 세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의 발현이었다고 본다.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광역 통합'이다. 지역이 국가 단위의 산업과 인구, 자원을 감당하려면 일정한 규모와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선택이다.

현재 작극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이다. 더 이상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반복해서는 지역 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임한다.

전북 역시 이 흐름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선택의 시간이 가장 촉박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주와 전주 간의 통합이야말로 가장 시급할 때도 가장 먼저 쏘아올린 통합의 신호탄

이 아직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완주군민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서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완주 전주 간 통합을 통해 피지컬 AI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약속한 통합 광역 단위에 대한 연간 최대 5조원, 임기 내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그간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는 통합을 선언한 지역에 '말뿐인 분권'이 아니라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쥐여주겠다는 국가의 의지다.

지방 균형발전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삶에서 체감되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놓어준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인구 유입 효과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프라 건설이나 산업 유치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안정적 소득과 생활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지역은 삶의 터전이 된다. 전북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역시 이러한 생활 기반의 회복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전북의 미래는 전통 산업의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로컬 창업과 테크 기반 창업 육성,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북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구조로 전환된다면,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한국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은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이며, 이제는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라고 변화될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역시 선언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에 들어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 간 갈등 속에서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 내부의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때 완성된다.

전북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전북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여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정치권과 이식 파는 모든 모두가 행동으로 그 답을 보여줄 시간이다.

사설

고속열차 예매 전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속열차 KTX와 SRT, 예매 경쟁이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 좌석 매진, 티켓팅은 요란하다.

금요일 오후, 오송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미 1시간 전 입석 승객으로 가득 찼다.

표를 구하지 못해 무작정 기차에 오른 승객, 일부 구간만 발권한 승객들도 나온다.

수서발 고속열차 SRT는 평일 낮에도 매진이 일상이다. 새로고침하면 가끔 표가 생기지만 거의 없다. 운이 좋아야 한다. 거의 로또 2등 되는 급이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 1,8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6%가 늘었다. 2023년 1억 명 돌파 이후 꾸준한 상승세지만, 시속 300km 이상 고속선에는 두 편성만 있었

을 뿐이다. 정부는 좌석난 해소를 위해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기로 했고, 다음 달부터는 KTX와 SRT가 수서역과 서울역 양쪽을 교차 운행한다.

올해 수위와 인천발 KTX도 개통을 앞둔 상황이다. 열차 추가 투입에 이어 장기적으로 고속선로 확장도 시급하다. 현재 경부선 평택-오송 간 선로는 100% 포화 상태다.

기존 선로 아래로 깊이 70미터 터널 공사에 들어갔지만, 완공은 2028년 이후다. 이 때문에 탄력요금제 등 수요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십년 넘게 동결된 윤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도 미룰 수 없게 됐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KB금융그룹 등 전북혁신도시 조성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 종합허브를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 전북도원들이 "깊은 해안과 과감한 결단이 담긴 역사적 선택을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원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동시에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북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임직원과 가족들의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지역 차이를 넘어 국가 전략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중심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과 기후·에너지 금융 기능을 보완·확장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최근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차로 내 차량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현장에서는 통행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크고 작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 간 약 200여 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유형으로는 측면 충돌, 회전차량에 대한 양보 미이행, 연석 충돌 단독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회전교차로 문화를 위해 다

회전교차로, '양보'와 '깜빡이'가 교통안전 결정

음의 세 가지 핵심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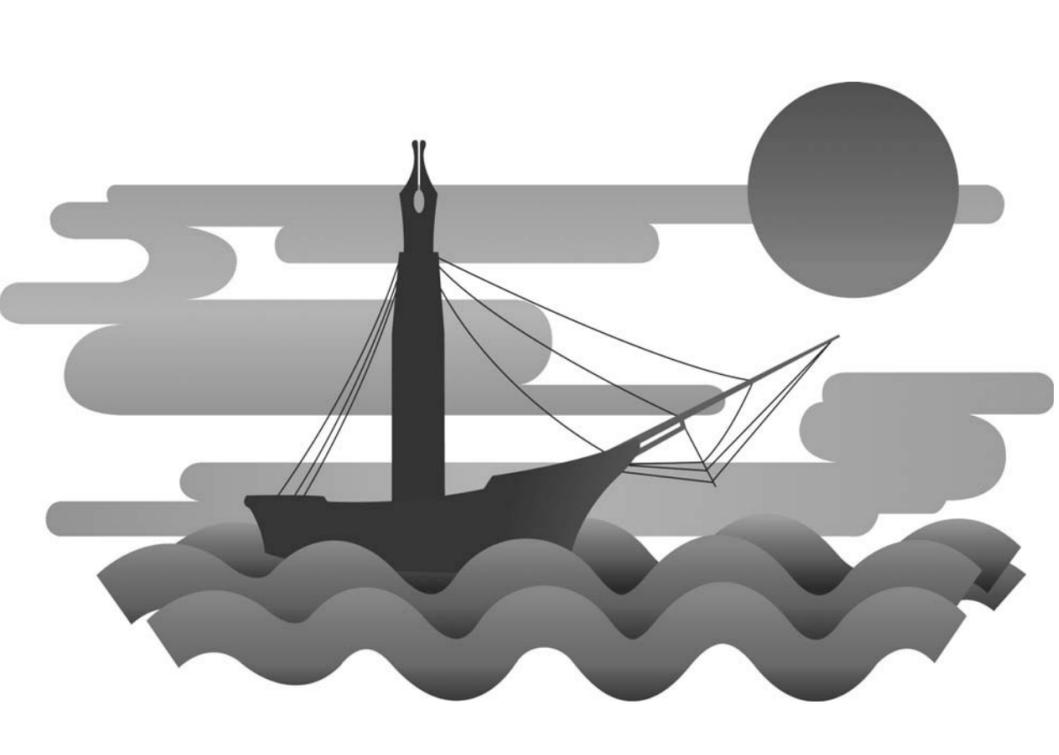
첫번째 수칙으로, 회전 중인 차량이 절대 우선이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 내부를 돌고 있는 차량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하고 회전 차량의 흐름을 끊으며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명백한 통행 방법 위반이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진입 전 서행하며 회전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많은 운전자가 진입할 때는 좌측 깜빡이를 켜지만,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생략하곤 합니다.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만 만 아니라, 진입을 대기 중인 차량에게 "내가 곧 나갈 테니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는 교차로의 회전율을 높이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셋째는 회전교차로는 고속 주행을 위한 구간이 아니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다차로 회전교차로의 경우,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추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입 전부터 목적차에 맞는 차로를 선택해 주행해야 합니다.

교통 기반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용자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내가 먼저'라는 조금이라도 버리고 '회전 차량 우선'과 '방향지시 등 절등'이라는 기본 매너를 실천한다면, 회전교차로는 모두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길이 될 것입니다.

김동현 원주경찰서 이서파출소 경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